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8. 30.

자치행정위원회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 통보

3.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호우, 지진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나.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 이라 함)
- 지원 대상자(사망자 및 유가족)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제공 예정

다. 감면 내용

- 대상세목 : 사망자, 유가족의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

세 목	부 과 대 상	납 기	비 고
자동차세(소유분)	사망자, 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 유가족 소유 토지·주택·건축물 등	7월, 9월	
주 민 세	사망자, 유가족(개인분, 사업소분**)	8월	

* 지방세법 § 112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 / ** 지방세법 § 81①1가목 사업소분에 한정

- 감면세액 : 산출세액의 100%
- 감면방법 : 직권감면(신청에 의한 감면 병행)
-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붙임1

나. 관련부서 : 세정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내용은 사망자, 유가족의 2023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해당되며, 동의안 안건 제출 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사망자의 자녀 2명이 우리 시에 거주 중이며,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1,058천원(자동차세 3건 643천원/ 주민세 2건 22천원/ 재산세 2건 393천원)입니다.

- 본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을 요청한 사항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추가 자료] 경기도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자료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023.7.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7.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시·군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불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인			
수신자 버,서(세정,세무과 31개 기관)			
주무관	허흥준	세정팀장	노승호
협조자		세정과장	전결 2023. 7. 20. 회원삼
시행	세정과-16391	(2023. 7. 20.)	접수 세정과-28641 (2023. 7. 20.)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의회의결 진행사항 회신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023.7.20.)호 및 경기도 세정과-16391(2023.7.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별 추진 중에 있는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의회의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시·군에서는 불임의 서식을 참조하시어 2023. 8. 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 내 피해 사망자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 동시 진행되는 사안이며, 도세의 경우는 경기도 의회에서 별도 진행됨			
불임 (경기도)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의회의결 진행 상황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인			
수신자 버,서(세정,세무과 31개 기관)			
주무관	허흥준	세정팀장	노승호
협조자		세정과장	전결 2023. 8. 16. 회원삼
시행	세정과-18645	(2023. 8. 16.)	접수 세정과-32213 (2023. 8. 16.)

☑ 「지방재정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